No. 27

IIRI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IIRI Online Series

남북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구 본 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IIRI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2016.01

남북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구본학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냉전이 종식되고 25년이 지났지만 동북아 안보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있고 한반도는 냉전적 대결구조 하에 있다.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중 간 세력전이 또는 패권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라는 2중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대테러전 이후 미국의 개입 능력과 의지의 약화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역할 분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아베 정부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일 간의 세력경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에 더하여 지역정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남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안보위협 요인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공포정치를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의해 등용된 원로그룹을 권력의 일선에서 퇴진시키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숙청해 총살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로 인해 높아진 군부의 위상을 당을 통해 견제함으로써 잠재적 도전세력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국제질서와 북한의 군사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경정책과 군사도발 및 위협의 지속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사업과 일부 제한적인 인도적 지원 분야를 제외할 경우 교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간헐적인 대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핵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해5도 및 휴전선 인근 지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증대시키는 등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5년 8월 4일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고

는 북한의 은밀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로 대응하였고, 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포격으로 대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8월 22일부터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 겸 통전부장의 2+2 고위급협상이 개최되었다. 사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8월 25일 6개항의 남북합의로 위기는 진정되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5·24 조치 해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포기 등과 같은 핵심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8·25 합의가 그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이 5·24 조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또 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Ⅱ.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안보 도전

1.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지속

2014년 10월 4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하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장관 등과 회동했으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은 물론이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전면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되었다.[1] 2009년 2억 5천만 달러 이상 기록하던 일반교역은 2010년 1억 1천 7백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1년에는 227 달러로 축소되었다. 위탁가공교역도 2009년 4억 1천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0년 3억 1천 7백만 달러에서 2011년 5천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1> 참조).

개성공단 사업은 양적 규모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성공단 생산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9천만 달러)보

1)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5개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했다. (1) 북한 선박의 남한해역 운항 전면 금지, (2) 남북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3)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금강산 및 개성공단 지구 제외)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5)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외) 등.

다 21.9% 증가했으며,[2] 최저 임금을 둘러싼 남북 당국 간 대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유일하게 응한 사례도 지난 7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점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남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 변화(2009년-2014년)

(단위: 1,000 USD)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교역	255,140	117,666	227	844	559	117
위탁가공교역	409,713	317,579	4,992	0	0	0
개성공단	940,552	1,442,855	1,697,632	1,961,194	1,132,174	2,337,808
금강산관광 및 기타	73,676	34,148,	11,004	9,067	3,114	4,654
전체교역	1,679,081	1,912,248	1,713,855	1,971,105	1,135,847	2,342,639

※ 자료: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2009년-2014년.

북한이 2015년 7월에 개최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와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으며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남북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의 '전쟁연습 중단', '체제대결 중단',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준수' 등을 주장한 것은 남북대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한 국방력 강화'와 선군정치 및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노선' 추구를 선언한 것을 보더라도 남북대화보다는 남북대결을 통한 내부결속 강화와 체제안정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던 남북관계는 8·25 합의로 인해 대화를 재개하게 되었다. 10월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금강산

2) 『서울경제』, 2015년 8월 6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8/e20150806181505142840.htm.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3)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Online Series*, CO 15-01 (통일연구원, 2015년 1월 1일), p. 3; 이승열, "2015년 북한 신년사 특징과 전망,"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 1월 5일), p. 2; 통일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통일부, 2014년 1월 1일).

관광사업 등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적대적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에 적대적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권력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8·25 합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경우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3-5년 사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적 변화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8·25 합의로 인해 당분간은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5·24 조치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내부결속 강화

2012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총살부터 2015년 4월 30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간 김정은은 공포정치로 자신의 권력기반을 장악해 나갔다. 장성택을 비롯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가 7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위 간부 대부분이 김정은을 권좌에 옹립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irony)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4년차에 이른 김정은이 2년 이상 공포정치를 지속한 이유는, (1) 김정일에 의해 발탁된 원로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만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거나 숙청을 통해 충성경쟁을 유도하려는 것, (2) 김정은의 권력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잠재적 도전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 (3) 정치·경제·외교적 위기를 돌파하는 김정은의 능력에 회의적이거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 중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위기에 처할 경우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여 김정은의 권력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포정치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핵심 엘리트의 충성심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위 간부의 대량탈북, 김정은의 암살 또는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내전 또는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해 원로그룹들의 충성 경쟁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내부결속을

4)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Online Series*, CO 15-11 (통일연구원, 2015년 5월 15일).

다지기 위해 '미국위협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15년 7월 24일 개최한 육해공군 및 전략군 장병들의 반미집회와 7월 25일의 제4차 전국노병대회 등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한 것도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5]

지난 8월 6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즉, "미국이 무력증강을 통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구실로만 조선을 이용하려 든다면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6] 또한,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일찍이 역사가 알지 못하던 상상을 초월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의 대남 협박은 지속되고 있다.[7]

이러한 북한의 대남 및 대미 군사위협은 한편으로 우리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남북 간 군사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통제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오늘날 정보의 세계에는 국경이 없으며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에서도 이미 35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과 USB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의 유입은 평양을 방문한 학자 또는 외교관을 비롯하여 최근 평양을 방문한 우리 측 인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급격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핵 병진정책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정책은 이전보다 더 강경해졌다. 2013년 1월 24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8]는 성명을 발표한 후 동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 억제력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핵능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

5) 『중앙일보』, 2015년 7월 26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318618&ctg=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6) 『조선일보』, 2015년 8월 7일, http://news.chosun.com (검색일: 2015년 8월 7일).
7) 『News1』, 2015년 8월 9일, http://news1.kr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8) 『중앙일보』, 2013년 1월 25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20304&ctg= (검색일: 2015년 1월 25일).

을 것이라는 의도를 밝혀왔다. 2013년 3월 7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선제타격 권리'를 주장했고, 4월 2일에는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7월 27일 '전승절(종전기념일)' 기념연설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 상의 미제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9]이라고 하는 등 핵위협을 가중시켰다.

특히, 2013년 3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고, 그 대신 경제발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도 성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및 경제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발전까지 달성하는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시행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 방침」)'은 (1) 당과 군이 장악하고 있던 사업들을 내각으로 이관하였고, (2)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을 축소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한 생산에 대한 자율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3)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6·28 조치는 국제화와 세계화의 환경에서 북한이 적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10] 김정은은 「6·28 방침」을 통해 북한의 경제시스템 변화를 시도했고, 2년간의 운영 경험을 거쳐 2014년 5월 30일 새로운 '경제개혁조치(「5·30 조치」)'를 단행했다.

「5·30 조치」는 「6·28 방침」의 적용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전국의 모든 회사, 상점,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각 기업소가 노동자의 임금 및 가족의 생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며, 각 기업소는 이윤의 10-15%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적 분배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다. 「5·30 조치」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2010년 5월 장마당(시장)이 허용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기업소의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북한 경제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가 비록 소폭에 지나지 않지만 2011년 이후 4년간 플러스의 성장을 지속

9) 『중앙일보』, 2015년 8월 8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481071&ctg= (검색일: 2015년 8월 8일).
10) 『동아일보』, 2013년 10월 1일, http://news.donga.com/3/all/20131001/57932495/1 (검색일: 2015년 9월 7일).

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의 경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된다. 2014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139만원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968만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명목국민총소득(명목 GNI)의 남북 격차는 44배로 늘어났지만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11)]

그러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또는 경제특구 및 개발구 정책이 큰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5·30 조치」가 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관리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지 북한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보다는 개인 장사와 개인 농사를 통한 민생해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경제특구와 개발구 정책은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핵 및 장거리미사일개발, 대남 강경정책 및 도발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원활하지 못하며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노선」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범위에서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년 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할 것인지, 경제를 포기하고 핵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1인 독재와 강압통치체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핵을 선택할 경우,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폭발할 수 있으며, 경제를 선택할 경우, 개혁과 개방의 조류가 통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4. 북한의 군사동향

2015년 5월 2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고 주장했다.[12)]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동안 3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11) 한국은행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0.5%를 기록한 후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를 기록했다. 『서울파이낸스』, 2015년 7월 17일, http://www.seoulfn.com (검색일: 2015년 8월 24일).

12) 『조선일보』, 2015년 5월 2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20/2015052002410.html (검색일: 2015년 6월 19일).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2015년 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의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은 북한이 10-16개의 핵폭탄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영변의 재처리시설과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경우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20kt급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3]

2015년 8월 11일 영국의 군사전문 기관인 『IHS 제인』은 북한이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원심분리기 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시설의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통해 농축률 90%인 HEU를 연간 40kg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시설이 가동됨으로써 북한의 연간 HEU 생산능력은 80kg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핵폭탄 1개를 만드는데 약 20kg의 HEU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매년 4개의 HEU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4]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송체계의 개발에도 몰두해 왔다. 1990년대에 이미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했으며, 2007년에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했고, 199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5차례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빈번한 동·서해상으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중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와 사거리 연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KN-08 미사일을 20-30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5]

2014년 발표된 국방백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1,000여 발, 잠수함 70여 척, 장사정포 700여 문, 화학무기 2,500-5,000톤, 특수전 병력 20만 명, 사이버전력 6,000명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미 스커드-D, 노동, 대포동 1·2호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는 우리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16] 이와 함께, 최근에는 사정거리 120-20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전략 목표를 기습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출시험에 성공했고, 앞으로 4-5년 내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17]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후방

13) 『동아일보』, 2015년 2월 26일, http://news.donga.com/3/all/20150226/69822556/1 (검색일: 2015년 2월 26일).
14) 『동아일보』, 2015년 8월 13일.
15) 『동아일보』, 2015년 2월 26일.
16)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4년 12월), pp. 27-29.
17) 박창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자," 『국가안보전략』, 통권 38, Vol. 4, Issue 8 (2015), p. 32.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전 포착이 어렵고, 요격도 어려워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8)]

또한 북한은 2,000톤 규모의 '신포급 잠수함' 1척과 1,800톤 규모의 로미오급 잠수함 2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상어급 30여 척, 연어급 10여 척, 유고급 20여 척 등 최소 70척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수년 내에 3,000톤 규모의 골프급 잠수함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기습침투와 국지도발을 위해 비대칭 전력의 하나인 특수전병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수전병력은 전후방 구분 없이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특수전부대는 AN-2기나 헬기, 잠수함, 공기부양정, 무인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의 후방 지역 및 주요 시설에 침투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정보전사'를 집중 육성해 왔으며, 2009년에는 기존의 정찰과 작전 조직을 통합하는 정찰총국을 신설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2012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해커부대원 수를 6천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사이버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사이버전력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금융, 교통, 전력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9)]

북한은 NLL과 서해5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은 2012년 5회, 2013년 9회, 2014년 13회 NLL을 침범했고, 올해 들어서는 4월과 5월에 각 한 차례 침범했으나 6월에는 4차례 NLL을 침범했다. 북한의 NLL 도발은 더욱 과감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NLL 인근 백령도와 연평도 해상에서 수백발의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6월 14일에는 동해상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다.[20)] KN-01은 지대함과 함대함으로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로 우리의 함정을 목표로 하는 개량형 미사일이다.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의 갈도에 122mm 방사포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21)] 과거 서해에서의 충돌이 NLL을 둘러싼 해상함정들 간의 포격전인 것에 비해 향후 북한의 위협은 서해5도에 대한 대량포격 또는 기습점령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8) 『동아일보』, 2015년 5월 11일,
19) 『뉴시스』, 2015년 8월 1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 =NISX20150730_0010195683 (검색일: 2015년 8월 10일).
20) 『조선일보』, 2015년 6월 17일, http://news.chosun.com (검색일: 2015년 6월 17일).
21) 『동아일보』, 20115년 5월 26일,

5.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

김정은 체제가 획기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김정은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공포정치로 자신의 권력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공포정치에 희생된 그룹과 김정은 체제 자체에 불만을 가진 그룹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포정치가 오래 지속될수록 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1-2년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 공안기관들에 의한 권력엘리트 및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2011년부터 북한이 플러스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는 취약한 상황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압박,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중단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구와 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 한 해외자본을 유치하거나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제도의 일부 개선 등 경제개혁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체제개방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적 개혁만으로 북한 경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에서 향후 3-5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과 장거리미사일 및 남북 군사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희생하면서도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념적 이완을 방지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한국에 대한 안보 도전 요인

1. 북한 내부정세에 의한 도전 요인

김정은의 강압 및 공포정치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의 불만을 유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지도 엘리트 계층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이 극도의 혼란 상태로 들

어가거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내부 결속을 위해 군사긴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정세의 혼란에 따라 대량 탈북 난민이 발생하거나 탈북 과정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또는 군사긴장 조성 목적에 의한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북한도 21세기의 정보화 혁명을 비켜갈 수는 없다. 북한의 휴대폰 보급이 이미 350만 대를 넘어선 것에서도 보듯이 북한에서도 IT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부 세계의 정보는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며,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북·중 국경을 통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는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은 지속될 것이며, 주민들의 북한 체제 경직성에 대한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및 외부 세계와의 교류 증대는 불가피하게 내부의 이념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의 강압통치와 각종 통제기제들이 내부 갈등으로 증폭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지만 갈등의 수준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과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압박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강압적 통치와 이에 대한 불만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평양에서도 아랍 민주화 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극심한 혼란상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북한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어 주민 폭동 또는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인 광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극심한 재해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급감으로 대규모 아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주민 폭동이 발생하거나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단거리미사일인 스커드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다. 아직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500kg급)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핵무기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할 경우 2020년 경 그 정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700-1,000kg급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

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3월 북한은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이고 발사고도를 높이는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북한이 탄두중량이 1,000kg으로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포동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스커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지만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사거리를 줄여서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NLL 및 휴전선 인근 도발 위협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은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게는 수도권 안전보장의 전초기지이자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서해에서 북한 함정 및 잠수함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북한 지역 종심을 타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책동을 저질러 왔다.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도발한 후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9월 2일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고, 2000년 3월 서해 5개섬에 대한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즉, 서해5도를 3구역을 구분하고 2개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함정과 선박의 통항은 폭 2Km의 수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약 북방한계선과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에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된다고 하면 수도권 서쪽 해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서해5도는 완전히 북한에 포위되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기습 점령할 수 있으며, 서해 방어선은 강화도-덕적도-태안반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함정들이 어선으로 위장하여 공동어로수역에 들어와 선제기습 공격할 경우 우리 함정들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남포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에는 6개 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수십 척의 잠수함(정)을 포함하여 어뢰정 및 경비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상어급 등 중소형 잠수함과 연어급을 비롯한 소형 잠수정은 우리 경비함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황해도 강령군 사곶에 위치하고 있는 8전대는 고속경비정 80여 척을 운용하면서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의 우리 함정을 위협하고 있다.[22)]

북한은 2012년 초 황해도 고암포에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를

22) 『아시아경제』, 2015년 3월 24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409583089465 (검색일: 2015년 9월 10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기부양정은 40-50명이 탑승할 수 있으므로 70척의 공기부양정은 약 4,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시에 침투시킬 수 있으며, 30-40분 이내에 백령도를 기습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 또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서해5도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23)]

이렇게 볼 때, 서해 NLL 지역은 북한 경비정의 빈번한 NLL 침범과 우리 해군의 대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잠수정 침투에 대한 우리 해군의 대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해안포의 연평도 및 백령도 포격 또는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백령도 및 서해 도서 지역 기습 점령 및 협상 제의 가능성 또는 그 과정에서 확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에 대한 정부의 저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이 전단지 살포 풍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일부 포탄이 우리 민간 또는 군에 피해를 유발할 경우 우리 군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확전 가능성도 상존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군사긴장을 유발할 목적이나 우리 측 정보 탐지 또는 도발 목적으로 DMZ 침투를 감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목함지뢰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우리 군의 준비태세 또는 대응을 파악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지뢰를 매설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고 또는 충돌이 발생하거나 대응 과정에서 확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4. 사이버 위협

북한은 2012년 8월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 인력은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 3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의한 우리 인터넷 공격은 과거 월 4-5회에서 최근 월 20여회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4년 우리 국민들의 스마트폰 해킹을 위해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기도 했다.[24)]

북한 사이버 요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통일전선구축 및 사이버선전선동 방식은 북한 관련 주요 이슈 발생시, (1) 해외 주재 간첩 및 한국 내 좌경세력에게 북한 지령을 하달하고, (2) 한국 내 좌경세력이 해외 친북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을 게시하면,

23) 『조선일보』, 2015년 8월 2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5/2015082501560..html (검색일: 2015년 9월 10일).
24) 『조선일보』, 2014년 10월 29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9/2014102900257.html (검색일: 2015년 9월 11일).

(3)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선전선동 글을 게재하고, (4) 이를 국내 좌경 세력들이 개인 블로그와 유명 사이트에 퍼 나르기 하여 (5) 국내에 유포 및 확산하는 것이며, 「1 대 9 대 90 법칙」에 의하여 북한 사이버 요원 1명이 선전선동 글을 게재하면 추종 세력 9명이 실시간으로 퍼 나르고 이를 90명이 읽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5]

정찰총국산하 '전자정찰국(121국)' 소속의 해커 500-1,000명이 한국군과 전략기관에 대한 해킹과 바이러스, 악성코드 유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버 심리전부대인 '적공국 204호'는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대남 심리전을 수행한다. 또한, 해외에 친북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대남 심리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군과 수사당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친북사이트 및 SNS 계정 1,784개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90% 이상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며, 운영자의 상당수가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투입된 북한 정예요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능력은 핵과 화생무기 및 미사일 전력과 함께 비대칭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2011년, 2012년 국내 주요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KBS와 MBC 등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적도 있다. 북한이 우리의 국가 기간산업 전산망을 공격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전과 전력망을 공격하거나 항공, 철도 등의 교통수송망에 대한 공격, 또는 가스, 상수도 등 서비스망을 공격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무인기 및 SLBM 등 새로운 위협

2014년 3월부터 4월 사이 백령도와 파주 및 삼척 인근에서 북한에서 날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발견되었다. 이들 무인기는 저고도로 우리의 영공을 침투하여 군사목표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최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정확한 표적을 식별하기 위한 전술영상 수집 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조잡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무인기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소형이며 단순한 비행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우리의 군사정보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전송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생무기를 탑재할 경우 우리 군은 물론이며 민간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25) 『조선일보』, 2013년 8월 12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1/2013081100784.html (검색일: 2015년 9월 10일).

다른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8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수중에 은닉되어 적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체계의 핵심무기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4-5년 내에 북한이 SLBM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정찰위성이나 레이더로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체인과 KAMD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26] 킬체인의 주요 표적은 지상 고정 목표에 대한 타격이므로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과 SLBM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Ⅳ. 한국의 대응방향

1. 북한 급변사태 대비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대량 탈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내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대량 탈북사태 발생 시 탈북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물자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탈북민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과 협의해 두어야 하며, 동해상으로 탈출할 경우 일본과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또한 휴전선을 통하여 탈북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북한군과의 마찰 가능성 또는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핵 및 미사일 위협 대비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1) 김정은 정

26) 『조선일보』, 2015년 5월 1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1/2015051100284.html (검색일: 2015년 5월 11일).

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2)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개혁개방을 지향하는 온건한 대체 정권이 등장하거나, (3)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 통일을 지향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경우 등이다. 우리의 정책 대안은 상기 세 가지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 미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 (2) 중국을 통하여 북한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속 설득, (3) 북한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침투를 지속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은 2015년 2월 24일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꾸준히 핵개발을 지속해 왔다"고 하면서 현재 1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거리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 기술을 갖추었을 것으로 평가했다.[27]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제한된 요격능력만 갖추고 있는 패트리엇-2(PAC-Ⅱ)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PAC-Ⅱ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이 곤란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PAC-Ⅲ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PAC-Ⅲ의 요격 고도는 15Km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정점을 지나 낙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때만 요격이 가능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의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야 요격하게 되며,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실패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 후 낙하속도는 마하7-8에 달하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1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28] 이론적으로는 요격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KAMD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며, 24시간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 요격체계의 확보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장비들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다. 이들 장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기상여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KAMD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은 고정발사대에서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사일의 연료도 은폐된 지하에서 주입하거나 연료를 주입한 채 상당 기간 대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킬체인이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확실한 징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27) 『조선일보』, 2015년 2월 26일자, A3.
28) 『뉴데일리』, 2015년 3월 24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_s.html?no=239490&rvw_no=1559 (검색일: 2015년 3월 25일).

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동식미사일 또는 은폐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에 특수한 맞춤형 한·미연합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및 심리,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북한의 전략적 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억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29] 동시에 전면전과 국지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30]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비대칭전력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비대칭전력 즉, 레이저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역비대칭전력들은 2020년대 중반에 가서야 확보될 수 있으며 예산문제로 인해 실현될지도 불투명하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는 인식 하에 조속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미 연합확장억제전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확장억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 주한미군의 주둔, 한·미 간 긴밀한 안보 및 국방협력, 미국의 대한 핵우산 및 안보공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의 핵위협은 기존 재래식 군사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미국의 핵우산/확장(대)억제 능력을 수시로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B-2/B-52 전략폭격기에 의한 시위,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항 기항, 한·미연합훈련 등을 수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등 거부적 억제전략의 조기 구축도 미국의 핵우산/확장(대)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비현실적 접근법이지만,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29) 북한이 핵사용 위협 시, 핵사용 임박 시, 핵사용 시 등 상황을 구분하여 억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핵사용 위협 시는 외교적 대응, 핵사용 임박 시는 능동적 억제전략에 의거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kill-chain 능력 구비), 핵사용 시는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에 따른 응징타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0) 전면전 상황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모든 가용 능력을 동원하여 응징하고, 국지전 상황에서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나, 북한이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 또는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의지를 포기하도록 압도적 우위에 의한 응징보복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핵위협 및 협박, NLL 도발 등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군사긴장 고조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3. 능동적 억제전략 조기 구축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킬체인과 KAMD를 개발 배치하고 서해5도에 정밀타격 첨단 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포착하고 도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어에 치중하는 과거의 전략에서 벗어나 억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을 억제라는 개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억제란 능력(capability), 의지(will), 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신뢰(confidence)에 기초한다. 적이 도발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도발할 경우 타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실제로 도발할 경우 언급한 대로 타격을 해야 억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억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4. 사이버 위협, 무인기 및 SLBM 대비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제도 및 기구, 기술적 문제,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위협을 방지하는 행위자인 사이버 안보요원 양성 및 사이버 안보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을 제어할 관련 법령 신설 및 보완 등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역 사이버공세를 구사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저강도 공작이어서 그 위험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적화시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무인기와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북한 무인기와 잠수함을 전방위로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및 재정적 여건도 되지 않는다.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휴전선 전역에 저고도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고비용인 동시에 매우 비효

율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한 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 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하고, 수중음파탐지기(소나)의 성능이 뛰어난 해상초계기의 증강 배치와 3천톤 급 잠수함의 조기 도입 등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잠수함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즉, 방어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능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V. 결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SLBM을 비롯하여 특수전부대, 무인기 및 사이버전 등 비대칭전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핵무기와 SLBM에 대한 방어수단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킬체인과 KAMD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이며, 우리가 그런 수단을 확보할 시점에 북한은 킬체인과 KAMD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사전에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감시 및 탐지체계를 구축하고 타격수단까지 보유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및 SLBM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대칭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독자적 타격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스텔스기를 도입하고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는 것에 더하여 역비대칭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 연합 국지도발 대응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양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은 NLL과 서해5도에 그치지 않고 무인기를 통한 도발에서 최근에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침투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방송, 정부기관 및 주요 국가 기간시설에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이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

다. 지역 차원에서의 다자안보대화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되어 온 통일 논의는 국민들의 관심을 통일에 집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통일대박' 또는 '통일준비논의'가 통일을 앞당기지는 않는다. 통일 논의는 우리의 내부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북한은 더욱 반발할 것이며, 더 굳건하게 내부를 단속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대북방송, USB를 활용한 인기 TV드라마 및 영화 배포, SNS 등을 적극 활용하되 김정은 개인 또는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이들을 한국 사회에 잘 적응 및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우월성과 김정은 정권의 부정적 측면을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북한에 솔제니친과 류샤오보 같은 민주투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일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끝/